光日春秋

전 홍 택

경제·금융 교육 확대 시급하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침체에 처해 있으며 그 여파는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모든 금융 위기가 그러하듯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의 탐욕과 금융감독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배양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것은 서브프라임 대출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서브프라임 대출 이용자들의 금융 무지라는 것이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사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문맹의 퇴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미국은 '금융문맹 퇴치를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중학생 대상의 새로운 교과목으로 '돈의 수학 : 평생의 교훈'을 승인하였으며 '금융문맹 퇴치 봉사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美하원은 금년 4월을 '금융문맹 퇴치의 달'로 선포하였다.

금융교육, 보다 넓게는 경제교육의 부족이 초래한 경제문맹, 금융문맹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에서는 서베이 결과 900만명의 영국인이 은행예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기피하는 '금융공포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국, 러시아 등 유럽국가들에서는 정부가 경제·금융교육 확대를 천명하고 나섰으며 민간단체들의 경제·금융교육 사업도 활성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교육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교육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금융소외계층 규모이다. 금융서비스 이용자 3천463만 명의 20%에 달하는 720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금융서비스의 소외계층이다. 이중 260만 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금융대출과 자기명의의 사업은 물론 취업 등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신용카드 대란 등 정책 실패 및 서민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부족에 원인이 있지만 문제의 뿌리를 제공한 것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의 금융무지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금융무지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교육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고등학교 공통기본교육과정(중1~고1) 4년 동안 경제교육 수업시간 수는 총 30시간으로 지리의 4분의1, 세계사의 3분의1에 불과하며 그나마 2011년부터 20시간으로 줄어든다. 고교 2~3학년 과정에서는 경제가 선택과목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고교 졸업자 중 약 25%만이 경제를 수강하므로 결국 곧 성인이 될 고등학교 졸업생의 4분의3은 경제에 대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30시간 정도 배우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금융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껏해야 30시간의 10%를 넘지 않는 2~3시간 수업 받는 것이 고작이다. 이같이 경제·금융교육은 수업시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의 약 11.5%만이 경제를 전공하였을 정도로 담당교사의 경제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문맹과 금융무지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경제·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시간 수를 늘려야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독립된 공통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교과 내용에서 금융 특히 개인금융 관련 부분을 대폭 확충하여 고등학교에서 신용관리의 중요성,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위험 등 경제생활에 필요한 실용지식과 경제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혁신도시 재검토 파문 '비수도권' 뿔났다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지방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정치권도 대립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총선 이후의 정국에 최대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상이 걸렸다. 나주에 건설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빈껍데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키로 한 한전 등을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기관인 한전이 제외되면 혁신도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가운데 6개가 이미 착공됐다. 특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95% 이상의 토지보상을 끝낸 상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지만 혁신도시를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책 전환을 들고 나온 것도 떳떳하지 못하다. 아무리 효율과 실용, 경쟁을 중시하는 정부라지만 토론회 등 여론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틀을 무너뜨리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다.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머슴처럼 섬기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재검토하는 대신 수도권 규제는 대폭 완화키로 했다. '억제'에 치중해온 수도권 정책을 '경쟁력 강화' 쪽으로 전환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은 수도권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건설돼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민심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초·중등 교육 자율화 부작용 최소화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준별 이동수업(우열반),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을 비롯한 모든 학사일정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넘긴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학교가 지역 현실, 학생 수준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많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을 결정하면 지역과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 강화로 유능한 교사 확보 경쟁도 이뤄질 것이다. 이 같은 경쟁은 학생들의 학력향상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우열반을 편성하면 학생 간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학원 강사를 학교로 불러 들이고 사설 모의고사까지 치를 수 있게 돼 자칫 학교가 사설 입시학원화될 수도 있다. 학교장과 교사는 입시 성적으로 능력을 평가받게 돼 창의성·인성 교육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학교 현장이 황폐해질 우려가 있다. 부작용이 많은 만큼 자율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인교육과 학생 건강권은 어떤 이유에서든 포기할 수 없다. 자율화 조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경쟁과 평가의 만능주의로 가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장과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교 실정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편성, 실행해야 한다.

교육 자율화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자율화가 정착되려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자율이 주어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는 얘기다.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 고

이 덕 수

'75℃ 5분'을 아십니까

국민소득 증가로 국내 육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80년대에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kg에 지나지 않다가 최근 백색육 닭고기가 웰빙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8kg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닭고기 소비량은 크게 미치지 못한다. 1인당 연간 소비량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두배인 14.4kg, 미국은 다섯배인 42.6kg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닭·오리 고기는 그 역사가 오래된 육류이기는 하나,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그 소비량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광우병·구제역 소동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대한 불신이 번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닭·오리 고기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다.

닭고기는 지방은 물론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을 뿐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최상의 건강식품이요, 젊은 여성에게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다.

오리고기는 각종 중금속을 해독해주는 기능을 지녀 공해나 중금속 오염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필수식품으로 꼽히고 있다. 또 알칼리성 음식으로 피부노화 방지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다.

달걀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60g의 보양 덩어리다. 그래서 '아침·저녁 계란 하나 보약보다 낫다'는 말도 생겼다.

지난 3일부터 전북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언론 보도와 방역 장면 등이 전해지면서 닭·오리고기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북 김제에 이어 정읍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닭·오리고기 판매량이 5~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지난 2006년 AI 발생 초기에 닭·오리고기 매출 감소율이 20~30%에 달했던 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다.

이는 소비자들이 그간 AI파동을 겪으면서 섭씨 75℃ 이상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고병원성 AI는 사람과 가축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이지만, 감염된 닭이나 오리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감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닭과 오리고기는 먹어도 안전하다.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섭씨 75℃에서 5분만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쉽게 사멸된다는 점에서 튀기거나 삶고 구워 먹는 우리 식생활 문화로 견주어 볼 때 국내에서의 인체감염 우려는 극히 낮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농협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닭·오리고기·계란 먹는 날'로 지정해 가금산물 소비확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오리데이(5월2일) 마케팅 행사를 계획하는 등 다각적인 소비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소비자가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각 가정마다 우리 모두 조류인플루엔자의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양질의 단백질원인 닭·오리고기·계란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축산농가도 돕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기 고

이 병 열

4·19 民主路의 탄생

광주 4·19 민주로는 광주 4·19민주혁명 최초 발상 도로이며 시발지다. 1960년 불의에 항거한 광주 4월 민주화 주도자들의 혁명 함성과 발자국, 숨결이 스며있는 역사적인 도로다. 지금까지 역사의 음지에 있던 민주화 사적지가 4·19 민주로로 탄생, 48년 만에 역사의 햇빛을 보게 되었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중앙로(서방사거리~중앙초교사거리 1.5km)를 광주 4월 민주혁명의 역사를 기리는 4·19 민주로로 지정 고시함은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한 조치다.

광주의 역사 중 불의에 항거한 민중항쟁의 역사는 척왜항일의 역사로 1894년 동학혁명과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민주화 역사는 1960년 4·19민주혁명과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이 있다.

불의에 항거한 민중항쟁의 역사는 광주를 의향의 도시, 민주성지, 인권도시로 만들었다. 이들의 역사를 면면이 살펴보면 정의가 살아 숨쉬는 광주정신이 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여느 도시와 차별화되는 광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4·19 민주화 역사는 광주의 역사 중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 광주시민의 상당수는 광주 4·19 역사가 있었는지조차 모른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광주 4·19 민주혁명을 주도했던 역사의 주인공들이 2000년부터 광주 4·19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역사의 주인공들이 낸 성금을 모아 2002년 4월19일 광주 4월 혁명의 발상지인 광주고등학교에 광주 4월혁명 발상 기념탑을 건립했다.

또 광주 4·19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조직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탑 건립 추진위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인 광주 4·19혁명 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했다. 그 후 기념사업은 민주혁명 당시 역사의 현장을 체감할 수 있는 사진을 각인한 와비 3기를 발상탑 앞에 세웠다. 이것이 두 번째 광주 4·19 역사 기념물이다.

1960년 광주 4·19 민주화 운동 당시 선봉에 섰던 언론인 이 훈 씨가 당시 현장을 시로 표현한 '광주 4·19혁명, 그날'이라는 시비를 건립, 역사를 기리도록 했다.

2006년에는 46년 만에 처음 광주시에서 광주 4·19 혁명 기념회관 기공식을 가졌다. 대지 184평에 5층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예산상 2층만 준공되어 기념회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4·19 혁명 주도자들의 4·19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집념과 부단한 노력은 3년여의 산고 끝에 광주 4·19 민주로를 탄생시켰다.

4·19 민주로 탄생은 광주 4·19 민주화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광주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5·18 민중항쟁과 더불어 광주 민주화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민주성지 광주 위상을 업그레이드 했다. 제2, 제3의 민주화 사적지가 탄생, 5·18 민주화 역사와 4·19 민주화 역사가 조화를 이뤄 광주가 세계 속의 민주성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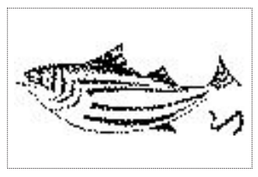
〈광주 4·19혁명기념사업위원회 회장〉

無 等 鼓

참다랑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역사에서 참다랑어(참치)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인 지남호가 1957년 8월 인도양에서 어른 키만한 참다랑어 한마리를 낚아 올린 것이 원양어업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참다랑어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단연 일본이다. 스시(생선초밥) 재료 등으로 연간 일본에서만 48만t의 참치가 소비된다. 2위인 미국이 3~5만t 수준이니 일본 시장의 크기를 짐작할 만 하다. 일본인들의 남획으로 참다랑어의 씨가 마를 지경이어서 이런 추세라면 수년내 멸종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참다랑어는 고단백 저지방,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이 풍부한 최고급 어종으로 한 마리에 수천만원을 훗가하기도 한다. 셀레늄과 오메가 3 지방산도 다량 함유돼 일본인이 장수하는 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여수시가 참다랑어 시험 양식을 지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다랑어 양식이 성공할 경우 침체된 양식어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민 소득도 높이고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에 참치를 즐길 수 있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여기에 레저·관광이 접목될 경우 획기적인 양식산업의 허브로 각광받을 수 있다.

문제는 참다랑어 양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고 지원액을 포함해도 50억원대의 비용이 소요된다. 기술 습득은 더욱 어려운 과제다. 조피볼락이나 넙치 등 양식기술개발에 5년이 걸렸던 일반 어종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본도 참다랑어 양식을 시작한 지 35년만인 지난 2005년 말에야 상품화에 성공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고유가와 인력난, 수입자유화 등으로 어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고 외국산 밀과 쌀 등 먹거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자급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식량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양식어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교육장소 제공 의무화 등 장애인특별법에 담았어야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담은 장애인교육특별법이 5월 발효된다. 이는 모든 장애인들이 바라던 일이다. 하지만 법의 발효를 앞두고 장애인들의 불만이 소리가 들려온다.

필자가 자원봉사를 나가는 곳에 야학을 하는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 운영비가 없어서 겨울에는 발전기를 돌릴 기름값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수업도 중단하고,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금 공연까지 한다. 장애인들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지원받길 원한다.

하지만 장애인교육특별법에는 이런 장애인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새 법률에 지원책과 관련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서 교사들의 인건비와 통학수단 등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거주지 주변에서 적당한 학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즉 더 배우고 싶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먼 곳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배움의 열망을 채워주기 위해 만든 법이니만큼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장애인들이 더 안정적인 가운데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봄나물 캐는 도시인, 농사 망치지 않게 조심을

고향의 부모님께서 농사 짓는 땅은 비록 다랑이 논이지만 기름지고 햇볕도 잘들어 쌀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좋다. 크기는 손바닥만해도 오랫동안 우리 집을 지켜준 고마운 논이다. 다랑이논이다보니 비가 왔을때 물 대고 흘러나가지 않게 가둬 놓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며칠 전 비가 조금 내렸을 때 못자리 일을 도우려고 고향에 갔었다. 때를 놓칠세라 아버지는 전날 삽을 들고 나가서 물꼬를 막아놔 빗물이 제법 고였던 모양이다. 조만간에 못자리를 할텐데 걱정이 없을만큼 물이 고인 것이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가봤더니 물이 절반은 빠져나갔다. 이상해서 여기저기 돌아봤더니 물꼬를 막은 곳에 커다란 사람 발자국과 물꼬 둑이 무너진 게 보였고 그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동안 물이 샌 것이었다.

정말 화가 났다. 논둑이 무너진 이유는 봄나물을 캐러 온 사람들이 밟아 짓이겨놓고 호미로 후벼놔서 일어난 것이었다.

천수답은 빗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찾아주고 봄나물을 캐며 농촌의 정취를 느끼는 것이야 좋지만 농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

▲유은규·광양시 황길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